

##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(공시송달)

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의인사실, 과태료 금액, 적용 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20일  
금융위원회 위원장

### 1. 공시송달 대상자

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
이경숙	620618-*****	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### 2. 서류의 명칭 :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

### 3. 서류의 내용 :

가.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

처분 대상자	처분원인	근거법규	처분내용
--------	------	------	------

처분 대상자	처분원인	근거법규	처분내용
이경숙	△△△△△실 소속 前 위임직채권추심인 이경숙은 채권관리시스템 기록 등을 통해 채무자 ♀♀♀이 법원의 금지명령 및 변제계획인가에 따른 채권추심금지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 우편물을 반복하여(2020.11.6., 2020.12.7.) 발송한 사실이 있음	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17조, 제18조	과태료 60만원

#### 나. 유의사항

□ 위반사실,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, 2022년 11월 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,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.

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,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·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,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□ 귀하가 2022년 11월 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
4.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(02-2100-2697)로,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(02-2100-2763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